

□ 베이비붐 세대(1955~63), 노후대책 막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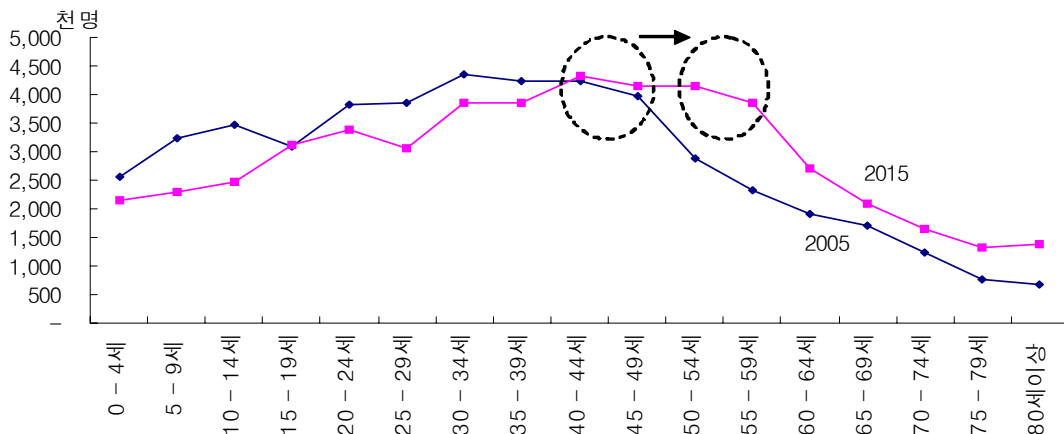
1. 예견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급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멀지 않아 이들의 노후보장소득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9년에 걸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816만명으로 총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집단임

·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출생자수, 취업자수 등에서 타 세대를 크게 상회하는 인구집단을 지칭

< 국내 연령별 인구 추계 >



자료 : 통계청

- 국내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하기 시작한 80년대 사회로 진출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함

· 戰後 경제개발의 시작과 동시에 태어나면서 이전의 '전쟁세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양육과, 비록 '콩나물교실' 이긴 하였지만 성장의 뒷받침이 된 고등 교육이 가능하였음

· 베이붐세대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훌륭한 인적자원이 된 한편 소득이 향상되면서 80년대 이후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등에서 막강한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음

- 이들 베이비 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구입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부동산거품을 유발하였으며, 90년대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 자식 교육을 위해서 강남아파트 붐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기도 함
- 2005년 현재 42~51세에 걸쳐 있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은 조만간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반면 늘어난 수명으로 20~30년 이상의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법적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이나 실제로 직장을 그만 둔 나이는 53세로 조사됨(통계청 고령층 경제활동안구 부가조사 결과(2005. 7))
 - 반면 2002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세의 기대여명은 38.59년, 45세는 33.99년, 50세는 29.52세임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2005년 현재 45세인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약 8년 후 은퇴하여 약 28년 동안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보장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안전망도 확고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직장의 안정감은 현저히 떨어져 있고, 가족의 부양 특히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어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음
 -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 (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나, 이러한 소득원 모두 불투명한 상태임

2.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원인 분석

- (근로소득 발생기간 축소) 외환위기 이후 일반화되고 있는 비자발적 퇴직 현상으로 베이비 붐 세대들의 근로소득 발생 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효율화의 차원에서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퇴직 연령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기 퇴직은 공적, 사적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조기 퇴직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근로자에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아날로그 세대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이 됨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 63년생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이미 35세로서 Digital Divide 문제가 적용되기 시작)

< 외환위기 전후 은퇴사유 비교 >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본인건강	가계여유/ 여가	가족원 돌봄
'91 - '99	16.7%	15.7%	47.7%	13.2%	6.6%
'00 - '03	10.9%	17.4%	55.9%	7.2%	9.4%

자료 :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 원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본격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현재 42 ~ 51세)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은퇴 후 얼마 동안은 근로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가능하나 대부분 그 수준이 은퇴 전 보다 크게 떨어짐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불안한 자산소득) 소비 수준이 잔뜩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베이비붐 세대들은 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 경제 호황기를 경험한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풍족하게 소비하던 습성이 배어 있으며, 이러한 비탄력적인 소비습성은 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자녀들의 (私)교육비에 엄청난 금액을 지출함)
 -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2004년말 현재 1인당 개인금융자산 규모(개인연금 포함)는 2,246만원 정도에 불과함 (반면 개인금융부채는 1,153만원임)
- 특히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노령 이자생활자의 이자수익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의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격 변수(주식, 금리, 환율, 부동산)의 가격 급등락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금리 이외 다양한 투자 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
- 국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주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가 정착되면서 주택의 규모를 넓이거나, 신규 주택 취득이 많았음
 -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 역모기지 제도는 아직 국민 정서, 주택가격 불안, 수명과 대출기관과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노후준비 예상(필요)자금 >

자금 규모	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7억미만	7억이상
비율(%)	4.5	23.4	29.2	16.2	12.9	13.8

주 : 서울 소재 직장인 20~50대 1,005명 대상(계층별 비례조사) 설문 조사 결과 (이 조사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은퇴 후 자신의 주택을 제외한 노후준비 자금으로 생각하고 답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05. 6)

○ (연금기능의 미흡) 선진국과 같은 公的 및 私的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

- (공적연금) 노령자들의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의 여력이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도 노인의 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이 가장 크며, 공적이전은 여타국에 비해 매우 미약
 -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부담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현재 60세에서 향후 65세까지)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 전망이 매우 어두운 실정

< 노인(60세 이상)의 주 소득원 국제 비교 >

(구성비,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근로소득	26.6	21.6	15.5	4.6
자산소득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9.9	6.6	23.3	13.7
사적이전 (자녀지원 등)	56.6	6.6	1.6	1.9
공적이전 (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6.6	57.4	55.8	77.6

자료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

- (퇴직금) 퇴직 이후의 기간이 급속히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는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 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 제도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
 - 2002년 현재 평균근속년수 6년, 중간정산 32.4%, 연봉제 37.5%
 - 퇴직적립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도 산시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사례 빈발
 -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4인 이하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의 적용이 배제되며, 퇴직금 적용비율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47.2% (02.8월 자료)
 - 수급권을 보장 보완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나 불완전

- 2006년 정부는 선진국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 혜택보기는 어려움
- (개인연금) 민간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의 판매는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판단됨
 -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등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층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형태
- (사적이전의 축소) 전통적 가족부양체제 붕괴, 소득발생 기간 축소 및 노인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자녀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의 주 소득원은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이었지만, 핵가족화 진전,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의 노인부양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 혹은 편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구성비가 매년 크게 증가 추세
 - 효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의 보험기능이 약화
 - 베이비붐 세대들은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소위 “깁세대”로서 세대간 사적이전이 단절되는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위로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식의 부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노인(60세 이상)의 주 소득원 국제 비교 >

(구성비,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근로소득	26.6	21.6	26.9	15.5	4.6
자산소득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9.9	6.6	8.8	23.3	13.7
사적이전 (자녀지원 등)	56.6	6.6	56.5	1.6	1.9
공적이전 (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6.6	57.4	7.6	55.8	77.6

자료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

3. 대응 과제

-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심각한 노후 소득보장 문제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미국·일본 등 전쟁을 경험한 다른 국가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준비 시간이 없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일본의 1차 베이비붐세대(1947~49년 출생자)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 ~ 64년 출생자)들은 그들이 충분히 고령화가 된 이후 사회가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충격’이 적음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지 않음
 - 고령화 속도가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적지원 능력,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음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예상 진입기간 : 일본 36년, 미국 86년, 한국 26년)
- 개인금융자산 규모 및 자산의 건전성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음
 - 총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2.7%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총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미국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개인금융자산의 건전성 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보다 크게 떨어짐(2004년도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 3.82, 일본 3.63, 한국 1.96임)
 -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이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함
-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 은퇴할 3~4년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경기회복이 어려우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국내 소비를 주도한 거대 인구집

단인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위축할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한편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층들이 필사적으로 사회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정책당국은 심각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베이비붐 세대 실태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소비 및 소득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여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는 멀지 않아 다가올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실태 파악이 매우 미비함

- (일자리 재분배)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랫동안 일자리에 계속 남아 있게 하도록 연령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를 재분배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직능·직급별 일자리배분을 연령 계층별로 세분화(즉, 경험과 숙련이 요구되는 노령 층 일자리와 순발력과 활동성이 필요한 젊은 층 일자리로 세분)해 베이비붐 세대가 오랫동안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기업은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고용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임금피크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구조 개선) 한편 베이비붐 세대들도 취약한 자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고,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동성을 악성 가계부채 상황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
-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게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분야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가계대출에 의존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투기적인 재테크 보다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춰야 할 것임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